

尹, 외교라인 교체 이어 내각·참모 대폭 개편 전망

안보실장·주미대사 임명 속도전 외교·안보 라인 연쇄 개편 불가피 총선 차출 박진·권영세 교체설 군 수뇌부 쇄신 필요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등 외교 참모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연쇄 개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 사의 표명과 조태용 새 안보실장 임명,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 사실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개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엔 조 실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오전부터 대통령실로 출근,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날 원래 잡혀 있던 안보실 업무보고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접견에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1차관의 부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내정자는 '아그레망' (주재국 부임 동의) 절

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아그레망에는 통상 4주 정도 소요되지만, 윤 대통령의 국민 미국 방문이 20여일 남은 만큼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최대한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조 실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지 2주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

주요국과의 양자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 1차관 자리가 비면서 당장 추가 인선이 필요해졌다.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면적인 내각 외교·안보 진용의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시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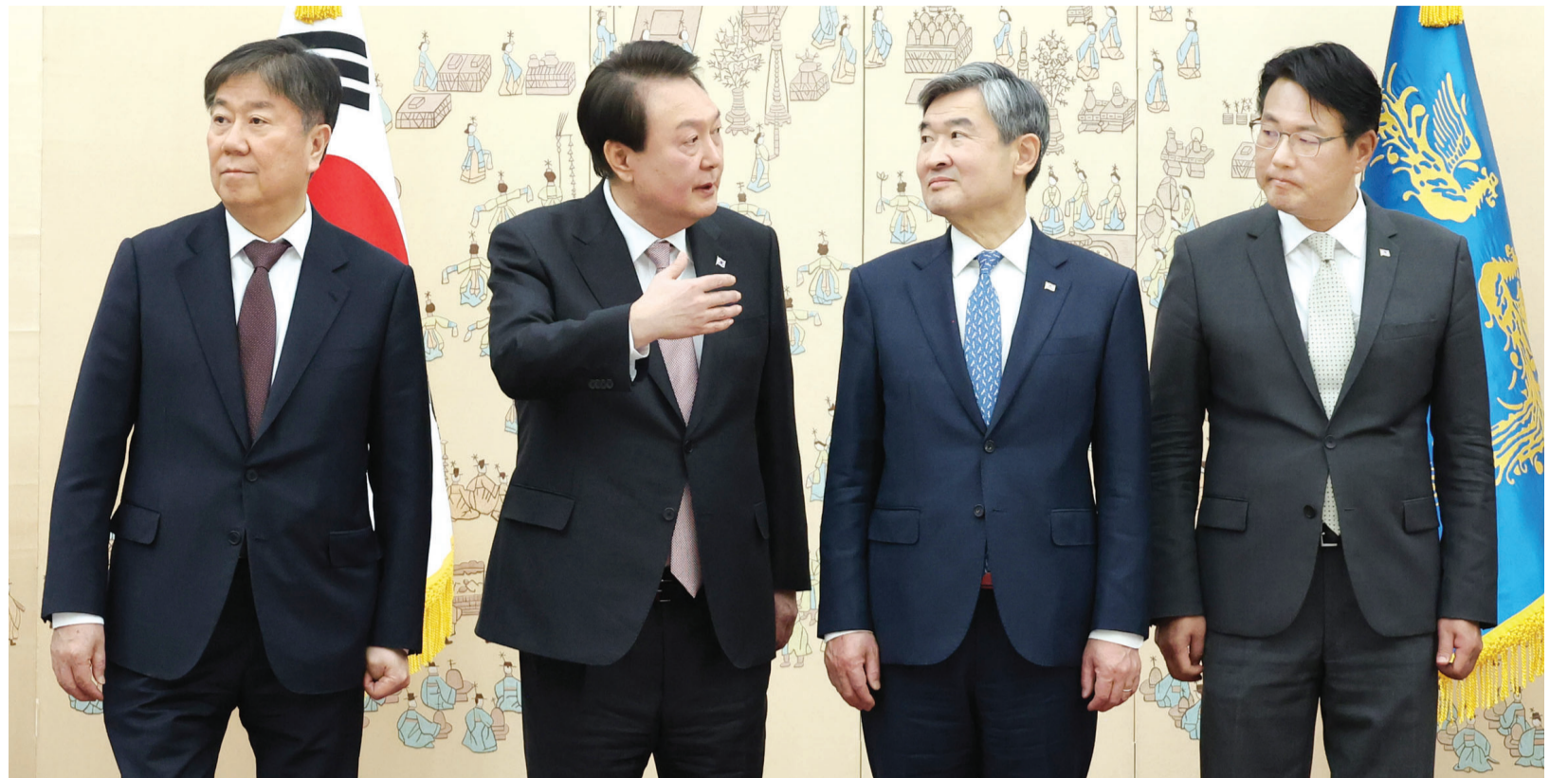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외교·안보 참모진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작년 말 복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 받은 군 수뇌부에 대한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월 말 국민 방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 정상외교 이전에 개편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석한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 등 직원들에게 기념촬영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재산 76억원 신고...5726만원 늘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76억9725만 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3999만9000원과 비교하면 5726만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약 71억6000만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예금으로는 약 5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739만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575만4000원이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은행 등 곳에 예치된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참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대표로 부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부패는 민주주의 위협·자유 억압”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에 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

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구는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

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할 보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하락 33%

NBS 조사...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제3차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1%, 부정 평가 6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1%p 오른 31%였다. 정의당은

4%, 지지 정당 없음은 29%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 ‘필요하다’는 응답은 41%였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 중 61%는 ‘최대 근로 시간 확대 및 유연화’를, 36%는 ‘최대 근로 시간 제한 및 축소’를 개편 방향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갈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